

OECD 국가의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 분석: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중심으로*

강경희** 전홍주***

Analysis of Childcare Support Policies and Fertility Rates of the
OECD Countries: Focusing on Cash-support Policies, Child-care
Facility Policies, and Tax Benefits Policies

Kang, Kyoung Hee Jun, Hong-Ju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33개국의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독립변수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용에 따른 효과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았을 때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효과의 증감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일관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비용의 산정과 재정의 재분배 그리고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하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적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주제어 : 양육지원 정책, 출산율

* 본 논문은 2013년 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학위청구 논문의 일부임.

** 제1저자: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 교신저자: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hjun@pcu.ac.kr

I. 서론

1960년 최초의 피임약이 개발되었고 여성의 출산에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 후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이삼식, 이지혜, 2011; 이인숙, 2005; 이현옥, 2011). 이는 세계적 추세로 OECD(2011a)에 의하면 196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이 3.23명 이었으나 1995년에는 1.72명, 2005년에는 1.65명으로 최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 합계출산율이 6.0명 이었으나, 1984년에는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정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하락하였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통계청, 2013). 2005년 이후에 한국과 OECD 국가의 출산율이 다소 증가하여 2010년에 한국은 1.23명, OECD는 1.74명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은 미래의 생산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 가능성과 잠재적 성장의 저해를 의미한다(김승권, 2003; 이삼식, 2005).

OECD 국가들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러 나라들 중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핀란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들이다. 스웨덴의 경우 1999년에 1.52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부터 1.98명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 주된 이유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 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삼식, 최효진, 김윤, 김영아, 2009). 영국은 1960년 2.72명이던 출산율이 2000년에 1.64명까지 하락하였고 2010년에는 1.98명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이 하락한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양육지원 정책에는 아동수당 제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다양한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등이 꼽히고 있다(정기혜, 김용하, 이지현, 2012). 프랑스의 경우에도 1993년 1.65명으로 하락하였으나 지속적인 양육지원 정책으로 2000년 1.99명까지 높아졌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양육지원 정책은 시민연대계약으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민법상의 계약 부부에게 법률혼을 한 부부와 동등한 사회보장혜택(지신정, 2012)을 주는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정책과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의 가족친화정책 그리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통한 양육의 경제적 보상 등이 있다. 핀란드의 출산율도 1980년에 1.63명까지 하락하였으나 2010년에는 1.87명을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의 양육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유급 출산 휴가와 유급 부모휴가 및 부친휴가 제도(Taipale, 2010),

임산부 진료 서비스(Maternity Clinic Service), 아동 수당, 재가보육 보조금, 자녀양육 보조제도 등이 있다(이윤진, 송신영, 200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핀란드의 경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휴직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육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지원 정책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확충,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OECD 보고서(Family Database와 Social Expenditure Database)의 분류에 따라 양육지원 정책을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그리고 조세혜택 정책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현금지원 정책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그리고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한다. 양육수당이란 양육자의 양육노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고(홍승아, 2005),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연령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개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급여이다(홍승아, 2011).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이 발생하는 동안 가구의 소득에 대한 지원도 현금지원 정책에 포함된다.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란 보육과 유아교육기관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부모에게 주는 보육료 지원, 아동과 시설을 위한 보조비 지원, 가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 가정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권미경, 도남은, 황성은, 2012). 그리고 조세혜택 정책이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세금혜택을 줌으로써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다자녀 가정 연금보험료 경감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은 특정 정책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부모에 대한 지원, 보육시설서비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조세혜택까지 매우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어 출산율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2007년 기준으로 위의 세 가지 지원방법 중 OECD 33개국 합계 평균을 기준으로 현금지원 정책이 GDP의 1.22%로 가장 많이 지원되었고, 2009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어 현금지원 정책이 GDP 대비 1.41%,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GDP 대비 0.94%, 조세혜택 정책이 0.27% 시행되었다. 전체 예산으로 살펴보면 2001년에는 GDP 대비 2.08% 지원되었으나 2009년에는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GDP 대비 2.61%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육지원에 대한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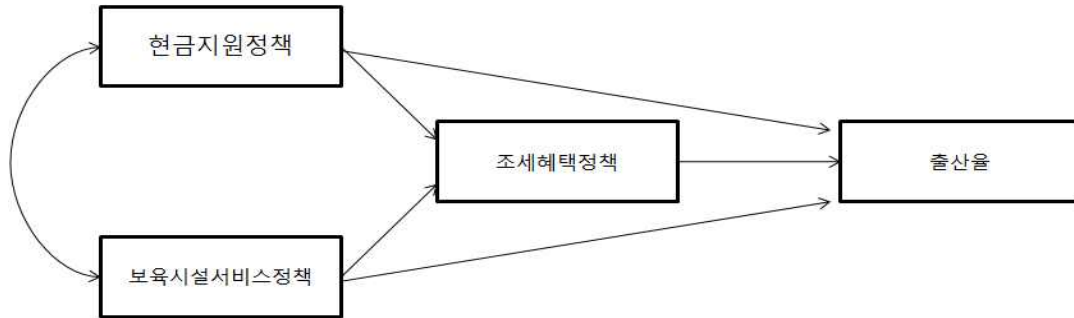
기본계획의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 총 12조 3,753억 원 중 저출산 분야가 5조 8,833억 원 (47.54%), 2011년 14조 3,500억 원 중 7조 3,950억 원(51.53%)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하였다. 이러한 저출산 분야의 지원 증가는 2012년에도 지속되어 총 17조 1,578억 원 중 저출산 분야가 9조 7,102억 원(56.59%)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31.3%가 증가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고령사회 분야가 2011년 대비 7.7%(0.5조)증가하고, 성장 동력분야가 전년과 동일한 것에 비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 속에 상당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고, 이렇게 투입되는 재정과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2006년부터 실행되어 도입된 정책들이 아직은 범위가 제한적이고, 도입된 후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외국의 경우 출산율 변동에 대한 개별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유계숙, 2009).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가족수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Gauthier(1998)와 스웨덴의 아동수당을 분석한 Kohler와 Ortega(2002)는 작지만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분석하였고, Landais(2003)는 프랑스의 가족수당 지급이 출산율을 5%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Kalwij(2010)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서유럽 16개국의 가족수당과 자녀양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캐나다의 현금지원 정책을 분석한 Duclos와 Lefebvre, Merrigan(2001)은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나 시기 효과인지 가구규모 변화인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각 나라별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는 일관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유계숙(2009)은 출산은 정책이외의 다양한 요인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구자의 연구방법과 분석대상정책, 국가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양육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33개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와 OECD Family Database에서 분류하고 있는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효과성과 정책 지원비용의 변화를 함께 비교하였다. 양육지원 정책의 지원비용은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각 정책마다 다르게 투입되고 있다. 지원비용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된 지원비용과 정책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비교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양육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OECD 국가의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양육지원 정책 비용과 정책의 효과성은 어떠한가?



[그림 1] 가설경로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OECD 국가의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OECD 회원 가입국 33개국을 선정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은 34개국이나 터키의 경우 원자료에 Data가 없는 관계로 3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33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칠레, 슬로베니아를 포함한다.

2.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 검색을 통해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와 'OECD Family Database'를 사용하였다. OECD 국가별 Data는 2년마다 각 국의 담당자 (Correspondent or Contactor)를 통해 자기보고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라마다 시행되

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만 있는 정책들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다양한 재원을 통해 이루어진 정책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하나의 재원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를 표준화해 OECD에서는 각 항목 아래에 다양한 하위 항목들을 제시하고 각 국의 담당자가 해당 항목에 Data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각 국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하였다(고경환, 2009).

1)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 SOCX)는 사회 정책의 지표에 대한 필요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프로그램 수준에서 공공 민간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안정적이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SOCX는 총 사회 복지 지출의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구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독특한 도구를 제공한다. 주요 사회 정책 분야는 노령, 유족, 무능력 관련 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택 및 기타 사회 정책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에 해당되는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 지원을 GDP 대비 %로 전환한 Social Expenditure Database(OECD, 2003), Social Expenditure Database(OECD, 2007)를 이용하였다.

2) OECD Family Database

본 연구에 사용된 OECD Family Database는 63가지 주요 특성에 따라 가족의 구조, 가족의 노동 시장 위치,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공공 정책의 Data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표는 일반적으로 원 데이터 또는 국가에 걸쳐 정보를 포함하고, 특정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정의와 방법론, Comparability 및 데이터 문제, 소스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OECD Family Database의 장점을 이용해 본 연구에서는 Family Database(OECD, 2011, 201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 정책의 지원은 GDP 대비 %로 환산되어 있다.

3) 연구자료 기간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패널자료(이삼식, 최효진, 정혜은, 2010; 정성호, 2012; 최성은, 우석진, 2009; 최준욱, 송헌재, 2010)와 설문지(노원, 문상호, 2010; 이명석 외, 2012; 이충환, 2012; 이충환, 신준섭, 2013)를 이용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후속출산 계획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행된 정책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시행된 정책의 수용으로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최소 10개월 이상 길게는 2, 3년이 소요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이 시행된 각 년도를 중심으로 3년 뒤의 출산율을 연구자료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단, 2009년의 경우 2011년과 2012년의 OECD 출산율 데이터가 아직 수집되지 않은 관계로 2009년과 2010년을 연구자료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3. 자료 분석

1)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구조방정식 모형이란(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특정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 모형 이론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확증적인 (Confirmatory) 형태의 모형에서, 상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와 그 유의성을 검증하는 모형을 말한다(허준, 2013).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를 살펴볼 수 있다.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는 모수가 많아 복잡한 모형일 때 적합도를 판명하기 위한 지수로 본 연구는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비교적 모형이 간단하여 간명적합지수는 생략하였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와 각 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Amos 7.0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OECD 33개국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1, 2003, 2007, 2009년의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1. 양육지원 정책의 효과성

본 연구에서 각 연도별(2001, 2003, 2007, 2009)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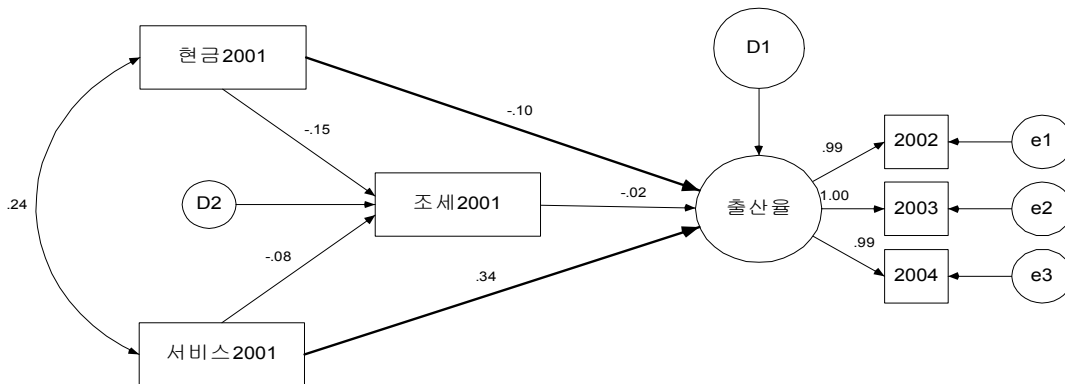
퍼 본 최종모델의 적합도 결과는 <표 1>에 나타내었다. 적합도결과 본 연구의 연도별 구조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MSEA*는 χ^2 통계량의 한계를 교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적합도 지표로 .05~.08의 값을 가지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08이하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를 만족시키는 결과는 각 연도별 모형에서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즉, 종속변인인 연도별 출산율에 직·간접적인 경로에 변화가 있었으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되었던 경로들 중에서 유의미한 경로와 그렇지 않은 경로도 발견되었다.

<표 1> 각 연도별 모델의 적합도 검증 결과(2001~2009)

적합도지수	χ^2	df	RMR	IFI	TLI	CFI	RMSEA
2001	24.0	6	.010	.922	.796	.918	.020
2003	3.7	6	.002	1.009	1.024	1.000	.000
2007	1.9	6	.001	1.013	1.049	1.000	.000
2009	.00	2	.001	1.012	1.099	1.000	.000
양호정도			<.50	>.90	>.90	>.90	<.08

1) 2001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2001년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10%이며,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3%로 이를 더한 총 효과는 -7%로 나타났다. 2001년 현금지원 정책이 조세혜택 정책에 미친 효과는 -15%로 나타났다. 2001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34%이며,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16%로 이를 더한 총 효과는 34.16%로 나타났다. 2001년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2%로 나타났다. 이로써 2001년에는 양육지원 정책 중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가 현금지원 정책 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2001년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각 변인간의 직·간접 효과를 자세히 나타내었다. 2001년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최종모델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2001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최종모델

<표 2> 2001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출산율 최종모델 경로계수

			Estimate	S.E.	C.R.	P
현금2001	→	조세2001	-0.051	.075	-0.679	.497
서비스2001	→	조세2001	-0.032	.085	-0.378	.706
조세2001	→	출산율	-0.025	.251	-0.101	.919
현금2001	→	출산율	-0.044	.090	-0.494	.621
서비스2001	→	출산율	.171	.102	1.680	.093
출산율	→	출산율2002	1.000			
출산율	→	출산율2003	.994	.026	37.635	***
출산율	→	출산율2004	.951	.043	22.141	***

* $p < .05$, ** $p < .01$, *** $p < .001$.

<표 3> 2001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각 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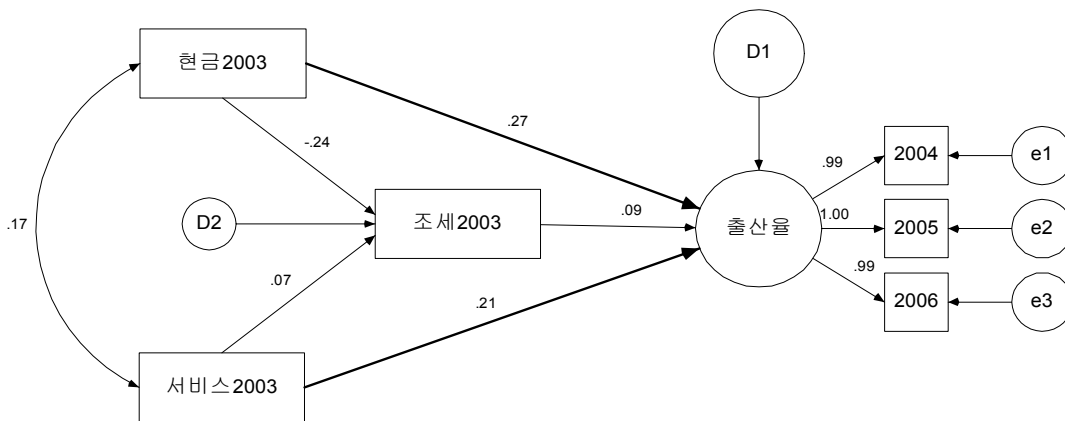
단위: %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현금지원 정책	→	출산율	-10	3	-7
현금지원 정책	→	조세혜택 정책	-15		-15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출산율	34	0.16	34.16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조세혜택 정책	-8		-8
조세혜택 정책	→	출산율	-2		-2

2) 2003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2003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현금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27%이며,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는 -2.16%로 이를 더한 총 효과는 24.84%로 나타났다. 2003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

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21%이며,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63%로 이를 더한 총 효과는 21.63%로 나타났다. 2003년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9%로 나타났다. 이로써 2003년에는 양육지원 정책 중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가 보육 시설서비스 효과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각 변인간의 직·간접 효과는 <표 5>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그림 3] 2003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최종모델

<표 4> 2003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출산율 최종모델 경로계수

			Estimate	S.E.	C.R.	P
현금2003	→	조세2003	-.080	.063	-1.260	.208
서비스2003	→	조세2003	.036	.102	.352	.725
조세2003	→	출산율	.092	.191	.481	.630
현금2003	→	출산율	.096	.066	1.466	.143
서비스2003	→	출산율	.122	.103	1.186	.236
출산율	→	출산율2004	1.000			
출산율	→	합계2005	1.005	.028	36.401	***
출산율	→	합계2006	1.007	.036	27.6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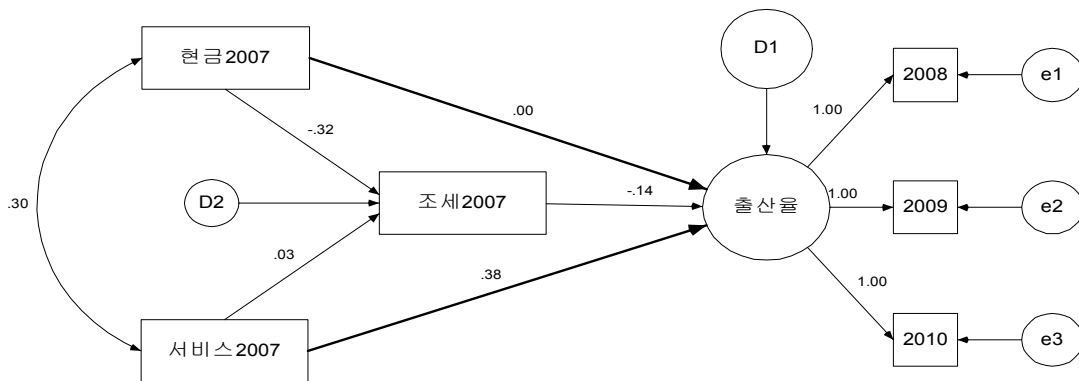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5> 2003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각 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단위: %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현금지원 정책	→ 출산율	27	-2.16	24.84
현금지원 정책	→ 조세혜택 정책	-24		-24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출산율	21	0.63	21.63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조세혜택 정책	7		7
조세혜택 정책	→ 출산율	9		9

3) 2007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2007년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로 나타났고,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4.48%로 이를 더한 총 효과는 4.48%로 나타났다. 2007년 현금지원 정책이 조세혜택 정책에 미친 효과는 -32%로 나타났다. 2007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38%,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42%로 이를 더한 총 효과는 38.42%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력은 p값이 .024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1.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07년에는 양육지원 정책 중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가 현금지원 정책 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최종모델을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4] 2007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최종모델

<표 6> 2007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출산율 최종모델 경로계수

			<i>Estimate</i>	<i>S.E.</i>	<i>C.R.</i>	<i>P</i>
현금2007	→	조세2007	-.127	.073	-1.748	.081
서비스2007	→	조세2007	.017	.104	.161	.872
조세2007	→	출산율	-.188	.230	-.817	.414
현금2007	→	출산율	-.002	.094	-.021	.983
서비스2007	→	출산율	.287	.127	2.256	.024
출산율	→	출산율2008	1.000			
출산율	→	출산율2009	1.008	.018	55.067	***
출산율	→	출산율2010	1.007	.024	41.6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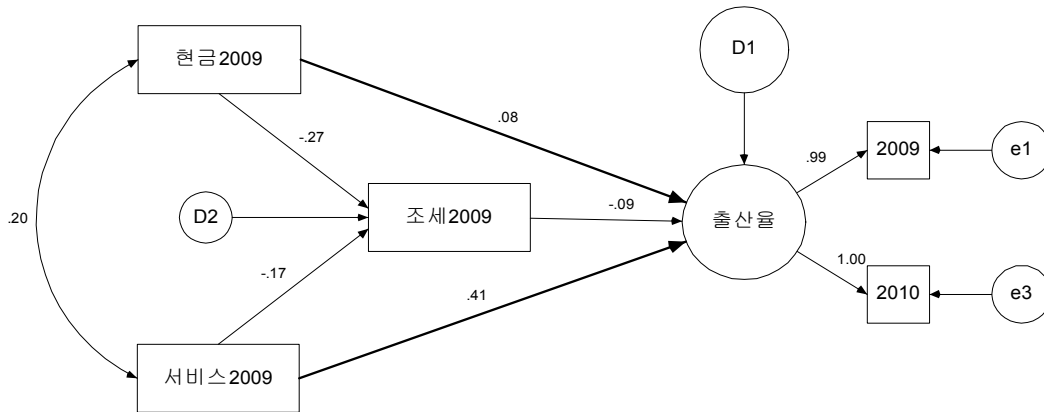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7> 2007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각 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단위: %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현금지원 정책	→	출산율	00	4.48	4.48
현금지원 정책	→	조세혜택 정책	-32		-32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출산율	38	0.42	38.42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조세혜택 정책	3		3
조세혜택 정책	→	출산율	-14		-14

4) 2009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2009년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8%로 나타났고,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2.43%로 이를 더한 총 효과는 10.43%로 나타났다. 2009년 현금지원 정책이 조세혜택 정책에 미친 효과는 -27%로 나타났다. 2009년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41%이며,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1.53%로 이를 더한 총 효과는 42.5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1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09년에는 양육지원 정책 중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현금지원 정책 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최종모델을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그림 5] 2009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최종모델

<표 8> 2009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출산율 최종모델 경로계수

			<i>Estimate</i>	<i>S.E.</i>	<i>C.R.</i>	<i>P</i>
현금2009	→	조세2009	-.098	.062	-1.573	.116
서비스2009	→	조세2009	-.088	.089	-.991	.322
조세2009	→	출산율	-.103	.204	-.504	.614
현금2009	→	출산율	.037	.073	.511	.609
서비스2009	→	출산율	.254	.101	2.501	.012
출산율	→	출산율2009	1.000			
출산율	→	출산율2010	1.011	.037	27.649	***

* $p < .05$, ** $p < .01$, *** $p < .001$.

<표 9> 2009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각 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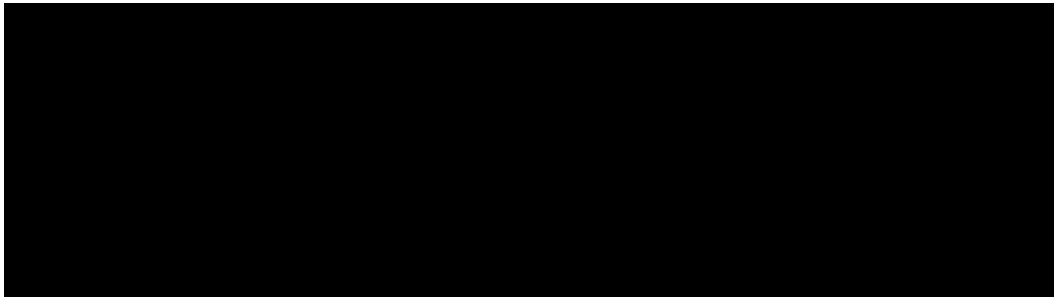
단위: %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현금지원 정책	→	출산율	8	2.43	10.43
현금지원 정책	→	조세혜택 정책	-27		-27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출산율	41	1.53	42.53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조세혜택 정책	-17		-17
조세혜택 정책	→	출산율	-9		-9

지금까지는 각 연도별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각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와의 종합적 변화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그림 6]에 나타났듯

이 2001년에는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가 34.16%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보다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가 3.21%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는 4.48%로 감소하였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는 38.42%로 증가하였다. 2009년의 경우에는 현금지원 정책 보다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가 32.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에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총 효과(2001~2009)를 자세히 제시하였다.

단위: %



[그림 6]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총 효과(2001~2009)

2. 양육지원 정책 지원비용과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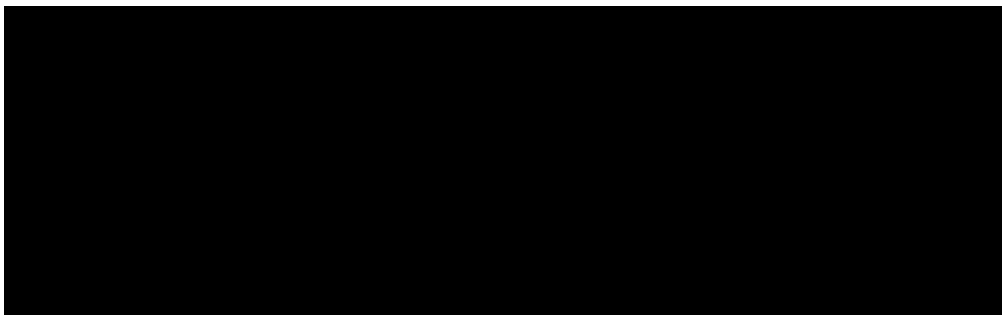
지금까지 연도 별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총 효과를 살펴보았다면, 다음은 현금 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의 각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를 정책 지원비용, 즉 지원된 비용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았다. 이는 정책 지원비용에 따른 정책의 효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즉, 지원된 비용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지원비용 이외의 또 다른 변수가 있는지 각 정책별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살펴보았다.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와 정책 지원비용(GDP 대비 %)을 연도별로 살펴 보았다. 현금지원 정책은 정책 지원비용에 따라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가 일관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과 비교하여 GDP 대비 0.06% 증가한 2003년에는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가 17.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3년과 비교하여 GDP대 비 0.08% 정책이 감소한 2007년에는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도 20.36% 감소한 4.48%로 나타났다. 현금지원 정책이 2007년과 비교하여 GDP대비 0.19% 증가한 2009년에는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가 5.95% 증가한 10.4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지원비용에 따라 출산율에 미치는 총 효과가 증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금지원 정책이 반드시 지원비용에 따른 영향만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지원비용의 증감에 따른 총 효과가 일정한 양으로 증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지원비용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 그 효과가 더 증가하기도하고 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로 2001년의 경우 현금지원 정책이 GDP 대비 1.24%가 지원되었음에도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직접효과는 -10%, 간접효과는 3%로 나타나 이를 더한 총 효과는 -7%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비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경제성장율과 GDP를 함께 살펴보았다. 2000년 세계 경제성장율이 4.01%에서 2001년 2.88%로 감소하였고, GDP도 2000년에 191.20십억\$에서 2001년 189.99십억\$로 감소하였다. 즉,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GDP가 감소하면서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현금지원 정책의 총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총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증감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7] 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현금지원 정책과 총 효과의 변화를 자세히 제시하였다.

단위: %, GDP 대비 %



[그림 7] 현금지원 정책 지원비용과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 (2001~2009)

현금지원 정책과 달리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를 살펴보면 정책비용과 효과성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2009년의 경우에는 정책비용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2003년의 경우 2001년에 비해 정책이 GDP 대비 0.27% 증가하였으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는 12.53%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도 2003년과 비교해 정책은 GDP 대비 0.12% 감소하였으나 반면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는 16.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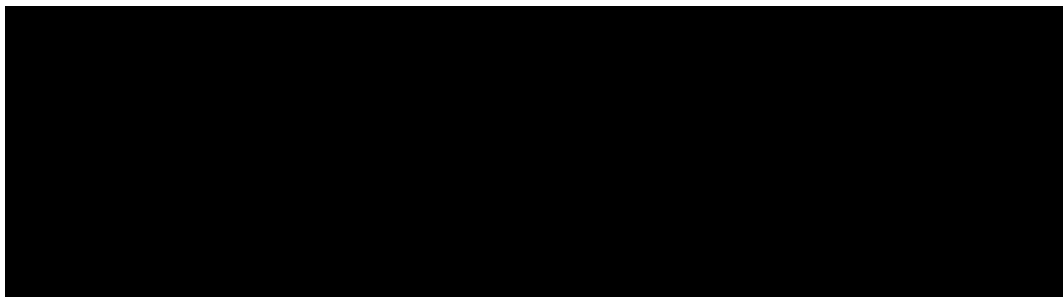
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는 정책비용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하지만 더 큰 영향을 받는 다른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2006)에 의하면 보육시설서비스는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부모의 원활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 아래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경우 지원되는 정책비용, 즉 지원비용 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얼마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다양성과 포괄성 그리고 보육시설서비스의 질 등이 출산율 제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경제연구원(2013)이 2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 보고서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1980년 이전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1990년 이후 양(+)의 관계로 전환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와 양성평등의 고용 문화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동반 상승 현상이 두드러졌다. 예를들면, 뉴질랜드, 미국, 스웨덴, 영국, 프랑스, 호주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면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게 나타나는 반면,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체코, 한국 등의 저출산 국가들은 여성경제활동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때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정책 양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8]에서는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2001~2009)를 제시하였다.

단위: %, GDP 대비 %



[그림 8]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지원비용과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2001~2009)

조세혜택 정책은 현금지원 정책이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과 달리 정책비용도 적고 정책 양의 변화도 크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혜택 정책은 [그림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총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의 경우 2001년과 비교해 조세혜택 정책이 GDP 대비 0.01% 감소하였으나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는 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의 경우에도 조세혜택 정책은 2003년에 비해 GDP대비 0.03% 증가하였으나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는 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세혜택 정책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지 본 연구를 통해 알 수는 없었으나 지원비용과는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단위: %, GDP 대비 %



[그림 9] 조세혜택 정책 지원비용과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2001~2009)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OECD 33개국의 2001년, 2003년, 2007년, 2009년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으로 살펴보았다.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현금지원 정책은 2001년, 2003년, 2007년 2009년 양육지원 정책 중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나 조세혜택 정책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나 출산율에는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에 비해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로 첫째, 지원방법과 비용에서 찾을 수 있다. 전체적인 지원비용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원방법이 아동수당의 경우 16~18세까지 나누어 매월 지급되다 보니 실제 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15년 이상을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받다보면 그에 대한 체감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지원의 증가량이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금지원 정책은 연구문제 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원비용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정책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수당의 지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유계숙(2009), 장혜경(2004)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현금지원 정책의 목적이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비용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비용이 얼마나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 하였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지원 정책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김수정, 2006; 김현숙, 류덕현, 민희철, 2006; 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 2011; 최성은 외, 2009; 홍승아, 2011)들도 있다. 즉, 많은 현금이 부모에게 직접 지원될 경우 지원되는 현금에 의지하여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지만 그 이상 현금 지원을 확대하였을 경우 여성의 노동권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현금지원에 대한 확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해미 외(2011), 최성은, 우석진(2009)은 현금지원 정책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지원대상과 범위, 금액 등에 대해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셋째, 현금지원 정책이라 해서 지원비용의 영향만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2001년 현금지원 정책이 GDP 대비 1.24%가 지원되었음에도 총 효과가 -7%로 나타난 것에서 다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세계 경제성장율이 4.01%에서 2001년 2.88%로 감소하였고, GDP도 2000년에 191.20십억\$에서 189.99십억\$로 감소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같은 비용이라 할지라도 부모들의 양육 부담완화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이러한 낮은 체감도는 효과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1년, 2003년, 2007년, 2009년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으로 살펴 본 결과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정책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2001년에는 출산율에 34.16%, 2003년에는 21.63%, 2007년에는 38.42%, 2009년에는 42.53%의 효과를 나타냈다.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사회적 변화와 배경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본격화 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부담 완화등 사회적 배경과 함께 실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함께 성장한 정책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의해 돌봄 및 가족지원과 관련한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였고(김은영, 2010; 진선미, 장용석, 강은나, 2011), 보육시설서비스는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부각되기도 하였다(최은영, 2007).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원비용 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이 달라지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된다. 실제 2000년대 이후 OECD 국가의 여성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증가 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핀란드의 경우 2002년 여성 경제활동참여 인원이 1,259천명이었으나 2008년 1,304천명으로 증가하였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2002년 12,465천명에서 2008년 13,29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2001년 13,212천명에서 2008년 14,246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도 비슷하다. 2001년 9,299천명이었던 여성경제활동 참여인구는 2012년 10,609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민희철 외(2007), 이정원(2009), 조명덕(2010), Sleebos(2003)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 단절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한바 있다. 즉,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출산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질적 보육시설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적 보육시설서비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사료된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각 나라별로 보육시설서비스가 매우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각 나라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1980년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어 사설 어린이집까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아동 돌봄의 유형을 다양화하였다(최연혁, 임재영, 2012). 가정보육을 중요시하여 현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영국은 아동 보육을 개인의 사적인 역할로 간주해 오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왔고 2004년 아동보육 10개년 전략을 발표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견고히 하였다. 영국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비공식 보육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자녀를 돌볼 경우도 이를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다(Smith 외, 2010). 프랑스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서비스는 크게 시설 보육, 가정 보육, 개인보육으로 나누어지며, 공보육 정책과 사 보육 정책이 잘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각 나라별로 다양한 보육시설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부모의 가치관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을 연구한 서문희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양

육수당을 보육료 수준과 같이 0세 39만원, 1세 35만원, 2세 28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할 경우 가정에서 돌본다고 응답한 경우는 23.9%에 그쳤고 계속해서 보육시설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70.7%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감소보다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요구, 부모들의 돌봄과 양육자체에 대한 어려움,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방향이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부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질적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때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 단절로 이어지지 않고 일과 가정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여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1, 2003, 2007, 2009년의 조세혜택 정책을 독립변수로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구조방정식을 실시한 결과 조세혜택 정책은 세 정책 중 출산율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혜택 정책이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원방법과 액수, 시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현금지원 정책이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과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와 OECD 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23개국 중 10개국(43.48%)은 조세혜택 정책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2003년에는 OECD 29개국 중 14개(48.28%) 국가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5개국(51.72%)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혜택 정책도 시간의 흐름 속에 정책이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2009년에는 OECD 33개국 중 12개 국가(36.36%)는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금지원 정책이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과는 달리 지원 비용이 크지 않다. OECD 합계 평균으로 살펴보았을 때 2001년에는 현금지원 정책의 $\frac{1}{6}$ 수준에서 지원되었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frac{1}{3}$ 수준에서 지원되었다. 이러한 지원간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2009년에도 현금지원 정책의 $\frac{1}{6}$ 수준에서 지원되었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frac{1}{3}$ 이 안 되는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현금지원 정책의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그리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지원이 보편적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조세혜택 정책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론 나라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영국),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프랑스, 핀란드)들도 있다. 조세혜택 정책의 이러한 지원비용과 방법을 통해 보았을 때 현금지원 정책이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과는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틀에서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자녀양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OECD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OECD 데이터는 각 국에서 해당 지표를 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2차적 자료로 정책에 대한 정의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세부적인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OECD 회원국의 양육지원정책과 출산율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첫째, 각 나라의 양육지원 정책은 문화와 역사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각 나라의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지원 정책은 큰 틀에서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으로 구분되지만 세부적인 틀에서 보면 매우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 정책들의 효과성을 출산율과의 관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기간을 2001년부터 2009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이 시기 사회적 배경의 영향으로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기간을 달리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2009년 이후의 양육지원 정책은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09년 이후의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경환(2009). OECD 국가의 가족정책 유형화와 한국에의 함의: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2007). **정부 저출산 정책 평가**. 서울 : 신우시스템.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38(5).
- 김승권(2003).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Health Research. 6. 보건연구정보센터, 1-17.
- 김은영(2010). 가족정책과 출산율. FES-Information series.
- 김현숙, 류덕현, 민희철(2006).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노원, 문상호(2010). 출산장려정책 신뢰도가 출산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임연령(25-45) 여성 표본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7-281.
-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민희철, 우석진, 김현숙, 김혜원, 류덕현, 옥우석(2007).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 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교육, 여성 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 보건복지부(2006). **보육사업안내**. 서울 : 문영사.
-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 안내.
- 서문희, 이윤진, 유해미, 송신영, 김세현(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지원정책연구소.
- 염경배, 김경미(2011). 군집분석을 통한 저출산 원인 및 정책 수요도출: 핵심정책 대상 집단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29(1), 163-190.
- 유계숙(2009).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7년 출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69-189.
- 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명석, 장한나, 이승연, 민연경, 최상준(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인식 조사 : 주 출산연령 여성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4(2), 26-94.
- 이삼식(2005). 저출산 시대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보건복지포럼**, 102, 7-15.
- 이삼식, 이지혜(2011). 일가정 양립정책과 보육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김윤경, 김영아(2009). 선진국의 인구문제 및 정책 방향 : 저출산 대책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정혜은(2010). 저출산 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진, 송신영(2009). 핀란드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세계육아정책동향 7.
- 이인숙(2005). 저출산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7-90.
- 이정원(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 의도에 관한 연구-합리적·가치적 선택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충환(2012).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 전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충환, 신준섭(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지방행정연구**, 27(1), 97~124.
- 이현옥(2011). 한국여성의 출산행태 결정요인 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진경(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 1-19.
- 장혜경, 이미정, 김경미, 김영란(2004).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 정기혜, 김용하, 이지현(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정성호(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31-52.
- 조명덕(2010). 저출산, 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26(1), 1-31.
- 지신정(2012). 프랑스의 동거 커플 양육비 지원이 부럽다. 한국선진화 포럼.
- 진선미, 장용석, 강은나(2011).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 혼합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mixed-effect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의 활용. **보건사회연구**, 31(3), 38-69.
- 최성은, 신윤정, 김미숙, 임완섭(2009)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성은, 우석진(2009). 양육지원 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평가센터.
- 최연혁, 임재영(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스웨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은영(2007).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선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62, 23-36.
- 최준욱, 송헌재(2010).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통계청(2013). 한국의 인구는 왜 줄어들까?(2013. 2. 20). http://kosis.kr/bsis/learning/learning_03004.jsp. 출력일 2012년 12월 18일.
- 허준(2013).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 고급편. 서울 : 한나래출판사.
- 현대경제연구원(2013).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출산율과 경제성장률 제고 가능. 539, 13-22.
- 홍세희(2012).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모형과 최신발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543-577.
- 홍승아(2011).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에 관한 연구 : 핀란드 가정 양육수당 제도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31, 85-119.
- Adsera, A. (2004). Changing fertility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 The impa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1), 17-43.
- D'Addio, A. & d'Ercole, M.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 The role of policy. **OECD 주요 저출산 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자료집**(유계숙, 윤홍식, 이삼식, 최효진 옮김). 서울 : 대영기획(원판 2008).
- Duclos, E., Lefebvre, P. and Merrigan, P. (2001). A Natural Experiment on the Economics of Storks: Evidence on the Impact of Differential Family Policy on Fertility Rates in Canada, Working Paper no. 136, Center for Research on Economic Fluctuations and Employment (CREFE), University of Quebec, Montreal.
- Gauthier, Anne Helene. (1998). *The State and the Family : 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 Gauthier, A. H., & Hatzius, J.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 259-306.

- Kalwij, Adriaan. (2010). The impact family policy expenditure on fertility in western Europe. *Demography*, 47(2), 503-519.
- Kohler, H-P., Billari, F. C., & Ortega, J. A. (2002). The emergence of lo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 Landais, C. (2003). Le quotient familiale a-t-il stimule la natalite francaise. DEA Thesis.
- OECD(2003). Social Expenditure Database(PF1.1).
- OECD(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PF1.1).
-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 OECD(2011a). OECD Family Database(PF1.1).
- OECD(2012). OECD Family Database(PF1.1).
- Sleebos, J. E. (2003). Low fertility rate in OECD countries : Fact and policy responses. Paris: OECD.
- Smith R., Poole E., Perry J., Wollny I., Reeves A. (2010). Childcare and early years survey of parents 2009. Research Report DFE-RR054. UK Department of Education.
- Taipale Ilkka. (2010). 핀란드가 말하는 경쟁력 100(조정주 옮김). 서울 : 비아북(원판 201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care support policies and the birth rate in 33 OECD countrie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he birth rate was the dependent variable while the cash-support policies, the child-care facility service policies, and the tax benefits policies were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ost effective factor on the birth rate was the child-care facility service polic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expenses, the cash-support policies showed stable fluctuation of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fluctuation of cash amount, the child-care facility service policies. I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ash-support policies, the adequate cost calculation to decrease the parents' burden for child-bearing, re-allocation of budget, and support methods and timing should be continually discussed. In addition, for the better effectiveness of the facility service policies, more various, comprehensive and high-quality facility service policies that could balance home and work, should be implemented.

▶ *Key Words* : *childcare support policies, fertility rates*

논문투고	2013. 08. 16.
수정원고접수	2013. 11. 30.
최종게재결정	2013. 12. 22.